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5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11일 (음력 12월 6일) 금요일

## ‘시 잠잠’ 전남 “1월 최대 고비...방역 고삐 죄야”

### 올 겨울 추위 시작 이후 전국적 단 한 건도 발생 안해

### 철새 증가 ‘비상’...생석회 살포·사육제한 등 ‘효과’

올 겨울 들어 예년과 달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이 잠잠한 상태지만, 전남지역은 1월이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차단방역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16일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4일까지 5개월가량 383건이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3787만마리의 가금류를 매몰 처분하는 사상 최악의 피해를 냈다.

지난 2017년 겨울에도 11월 17일 전북 고창을 시작으로 12월 10일 전남 영암 등 2018년 3월 17일까지 4개월간 22건이 발생, 654만 마리의 가금류를 땅에 묻었다.

전남의 경우 2017~2018년 겨울철 영암 4건, 나주 2건, 고흥 2건, 강진 2건, 장흥 1건 등 총 11건이 발생했다.

최근 AI 발생은 전남과 전북 등 호남에서 첫 발생한 뒤 중부권으로 북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올 겨울 들어서는 추위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관문’인 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의 오리사육은 235농가에서 384만마리로 전국 1008만마리의 38%,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년과 다른 양상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방역당국의 전방위적인 방역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남의 경우 예년의 전례로 불래 1월이 최대 고비라는 점에서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올겨울 국내에 도래한 겨울철새가 132만마리로 지난해(108만마리)보다 22%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사육제한과 생석회살포 등 전방위적 방역차단에 나섰다. AI가 반복발생하고 사육농가 밀집지역인



나주 20곳, 구례 5곳, 해남 1곳, 영암 24곳 등 50곳 농가에 대해 휴지기를 도입해 사육을 제한시켰다.

5년내 2회, 3년내 1회 AI가 발생한 종오리농장 9곳과 바이러스에 취약한 80주령이 초과한 종오리들이 있는 7곳 농장에 각각 방역초소를 설치해 발생을 원천차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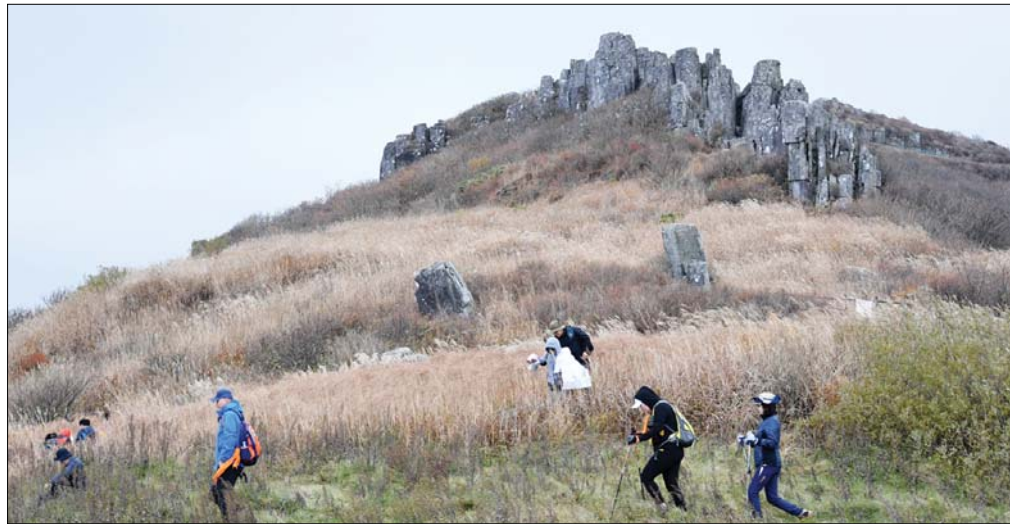
종오리 농장에 전남도청 소속 전담공무원 39명을 배치해 1농가 1담당제 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살포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유인경로 원인분석을 통해 선제적 방역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특히 생석회는 아생 조류가 접근시 200도의 열이 발생해 바이러스가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광주 동구, 무등산 자락 개발행위 엄격 제한...자체 매뉴얼 제작



광주시 동구가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지 않은 무등산 자락 개발 행위에 대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동구는 무등산 일대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할 경우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구는 이날 입택 구청장과 도시계획위원

회 위원,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 난개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불법행위 발생 시 행정처리 절차’ ‘무등산 자락 개발행위 허가 시 추가 검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보다 엄격한 개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동구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 자체적인 개발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수·자산동 무등산 자락을 건축허가 전 ‘경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경관조례에서 정한 ‘경관지역’에 포함시켜 준 것을 광주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근 산수·자산동 일대 무등산 자락에서는 단독주택 건립 등 3곳에서 난개발과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져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동구는 이 중 일부는 훼손하거나 불법 형질변경을 시도한 2곳의 개발업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입택 동구청장은 “개발과 녹지보존의 조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정한 개발업무 매뉴얼에 따라 무등산 자락 개발행위 허가를 엄격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5·18 단체, 역사 왜곡 지만원 엄중 처벌 촉구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해온 극우논객 지만원(76)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5월 단체가 지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한다.

1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9차 공판)을 받았다.

지씨의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돼 선고일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5·18 재단은 설명했다.

5·18 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지씨가 끊임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주중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에서 ‘광주(북한 특수군)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공로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5·18은 북한군이 배후에서 조종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황당한 주장을 폈었다.

## Photo 漫評

### 억지춘향?

발전보·여권 지지층의 절반 이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계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정계복귀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피니우스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발전보·여권 지지층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54.2%는 ‘유 이사장이 정계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계에 복귀할 것’이라는 응답은 22.5%였다.

또한 발전보·여권 지지층 가운데 유 이사장의 정계복귀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9.3%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8%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응답은 유 이사장의 정계복귀 여부가 여론의 차기 대선 경쟁 구도를 뒤바꿀 수 있는 주요 영향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무원 전 의원 등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스1



정치에 안한다는데...

유시민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또 정치라서...

정두언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태진아

「광주교육 청렴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광주광역시교육청

# The 청렴하면 행복해요!

